

# ‘11조 추경’ 누리예산·대우조선 쟁점

### “신속 처리” vs “꼼꼼 심사”...여야 기싸움 예고

### 누리과정 포함 여부·서별관회의 청문회 입장차

이번주초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여 여야 정치권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여야는 추경의 필요성에 큰 틀에서 공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편성 내용과 처리 시기 등을 놓고 대립하고 있어 기 싸움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추경안이 기업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긴급 처방을 역설하면서 신속한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서민경제 활성화, 청년실업 해결, 보육갈등 해소 등에 초점을 맞춰 면밀하게 추경안을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난항

을 예고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새누리당은 2주간의 상임위·예결위 심사를 거친 뒤 내달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추경을 통해 6만8000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올해 성장률도 0.2~0.3%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야당이 추경안 처리를 지연시켜선 안 된다는 압박인 셈이다.

이에 반해 야당은 국민 형세 사용처를 살펴보는 과정인 만큼 꼼꼼한 심사로 여당의 신속처리 압박에 맞서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야당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재원을 정부가 올해 예비비로 편성하거나 이번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고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더민주 일각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하지 않으면 추경안을 통과시켜줄 수 없다는 강경론을 펴고 있다.

더민주 강희용 부대변인은 “누리과정 등 영유아보육 전액 국비지원 공약 이행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추경안 논의를 위해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선·해운 구조조정과 관련,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1조4000억원을 출자하기로 한 것을 놓고도 여야 간 입장차가 크다. 여야 3당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산은의 자금 지원을 결정한 청와대 ‘서별관회의’를 고리로 산은을 담당하는 정부위원회와 수출입은행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한 상태다. 다만, 청문회 개최 방식 등을 놓고선 여야의 살바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야당은 기획재정부와 정부위 등 개별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주장하고 있지만, 야

당은 기재위-정부위 연석회의 형식의 청문회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추경안은 이르면 25일, 늦어도 26일 국회에 제출되며, 제출 다음날 시정연설이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조6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집행한 데 이어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10조원대 추경이다. 추경 재원은 올해 예상 세수증가분 9조8000억원 및 지난해 세계잉여금 1조2000억원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국제발행 없이 재원을 조달하고, 세수증가분 일부는 채무상환에 활용하는 식으로 재정건전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추경을 통해 구조조정 및 일자리 확충에 역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박지경기자 jkpark@

# 늘어가는 지지자 모임, 孫 복귀 재촉

### 손사모·손의길 등 잇따라...손학규, 29일 해남 행사 참여

정계복귀 압박설이 나오고 있는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의 자생모임이 잇따라 생겨나고 있다. 지지자들은 ‘손사모’, ‘손내모’, ‘손의길’ 등 약칭을 내걸고 정계복귀를 재촉해 손 전 고문에게 화답할지 주목된다.

‘손학규와 내일을 함께하는 문화예술인 모임’은 오는 29일 오후 5시 해남군 해남읍 해남문화원 2층 강당에서 ‘손학규와 함께 저녁이 있는 문화하마당’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국도의 출발지, 땅끝 해남에서 저녁이 있는 삶을 되찾으려는 국민의 간절한 마음을 손 전 고문에게 전달하는 자리라고 주최 측은 설명했다. 손 전 고문도 초청돼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박선정 광주대 겸임교수의 사회, 한국문학평화포럼 이승철(시인) 사무총장의 연



출로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각지의 시인, 작가, 화가, 서예가, 명상음악가, 가수, 성악가, 소리꾼, 춤꾼, 무형문화재 전수조교 등 문화예술인 25명이 함께해 종합 문화예술축전을 펼친다. 종합예술축전 형식으로 공연이 진행되며 서예가 효봉 여태명(익산), 한국화가 조병연(목포)이 자신의 서예작품과 그림을 손 전 대표에게 전달한다. 행사가 끝난 뒤 손 전 대표는 문화예술인들과 저녁을 함께 하며 한국정치외교의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최권일·강진=남철희기자 cki@



오늘부터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야 3당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24일 오후 국회 정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 국조에 임하는 의원들의 공동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훈, 국민의당 김상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민의당 송기석, 정의당 이정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연합뉴스

# 밀린 책 읽거나 일에 파묻히거나

### 정치권 휴가계획 제각각

하계 휴가철이 되면서 여야 지도부의 휴가계획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새누리당은 전당대회를 2주 앞두고 있어 휴가를 갈 수 없는 처지고, 국민의당도 산적한 현안으로 휴가 계획이 없는 상태다. 반면 더민주는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되기 전 잠시 짬 내 휴가를 계획하고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여름휴가를 미루고 국회에 남아 현안을 챙길 것으로 보인다. 정진석 원내대표도 아직 휴가계획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휴가계획이 없다고 한다. 주말이면 어김없이 지역구에 내려갔다 오는 ‘금구월래’(金鑄月來)의 원칙을 고수해온 박 위원장은 원래 좀처럼 휴가

를 쓰지 않는다며 올해는 당무와 원내 업무를 모두를 챙겨야 하는 터라 더욱 여의치 않아진 상황이다.

전당대회가 한달 이상 남아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더민주 지도부는 8월 국회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잠시 휴가를 갈 것으로 보인다. 김종인 대표는 내달 1~5일 휴가를 냈다. 평소만 들어둔 ‘독서 리스트’를 들고 아내인 김미경 이화여대 명예교수와 강원도 산등으로 떠나 휴식의 시간을 보낸다는 계획이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추경 논의가 본격화하는 8월 임시국회 전인 27~29일 휴가를 계획하고 있다. 원내현안이 산적한 만큼 일을 완전히 놓을 순 없겠지만, 원내대표 역할을 하면서는 특히 가족과의 시간이 더 줄어든 만큼 단 며칠이라도 짬을 내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 ‘김영란법’ 운명 이번주 결정된다

### 합헌여부 28일 선고 가능성...언론인·교원 포함 여부 쟁점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합헌 여부를 오는 28일 선고할 가능성이 높음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는 이달 28일로 예정된 정기선고에서 대한변호사협회 가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등 김영란 법에 제기된 청구 4건을 병합해 결론을 내릴 방침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지난 21일 재판관들이 사건의 쟁점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는 ‘평의’를 열어 이같이 잠정 결정했으며,

25일~26일께 선고 일정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평의에서는 주심 재판관이 의견을 내고 각 재판관이 의견을 표시했으며 주심의견을 토대로 결정서 초안 작성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며 재판관들은 이번 주말에 각자의 의견을 정리할 예정이다.

심판의 주요 쟁점은 공무원이 아닌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을 김영란법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다. 논란이 되고 있는 농축산업 피해·경제 위축 가능성 등은 선고에서 쟁점으로 다루지 않을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식비 등의 상한선이 원안대로 규제심사를 통과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22일 오후 국민권익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를 한 결과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의 가액 범위를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정한 시행령안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치권은 이르면 오는 28일 이뤄질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합헌 여부 선

고를 앞두고 후속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여야 3당은 다 같이 위험 결정이 나면 이를 반영해 개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지만 그 시기를 놓고 여야의 입장 차이가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이미 20대 국회에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사를 제외하는 대신 국회의원을 포함하는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다.

합헌 결정이 나오더라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물을 제외하거나 상한 금액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여야 농어촌 지역 의원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어 이러한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도 있다. 반면, ‘선(先)시행 후(後)보완’, 즉 법을 예정대로 시행하고 부작용이 발생하면 그때 가서 보완하면 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김영란법 시행 전까지 국회에서도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임동욱기자 tuim@

# 새누리 전대 여론조사가 관건

### 거물급 불출마 조직 약화...2007년 MB 여론조사로 뒤집어

새누리당 8·9 전당대회에서 조직보다는 여론조사가 승패의 관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어 주목된다. 거물급 주자들이 불출마하면서 조직 선거 동인도 약해졌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24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8·9 전대는 크게 당원·대의원 현장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를 합산해서 최종 결과를 환산한다. 현재 전대 선거인단 규모는 약 34만명으로 투표율을 30%라고 가정한다면 약 10만명이 투표를 하는

셈이다. 이 경우 여론조사 결과를 표로 환산하면 약 4만3000표가 된다.

과거에도 당내 선거에서 여론조사 때문에 승부가 뒤집힌 사례가 있었다. 2007년 대선 경선에서는 박근혜 당시 후보가 직전까지 당 대표로 활동하며 조직을 장악한 덕분에 당심을 얻고 현장 투표에서 승리했지만, 여론조사에서 이명박 당시 후보에 밀리며 결과적으로 이 후보가 대권투쟁을 거머쥐게 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 햇살론대출
- ✔ 임대보증금대출
- ✔ 정부정책자금대출
- ✔ 일일상환대출

※ 근저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 서양새마을금고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주유소사업소 720-2800